농림축산식품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행사(10.5.) 종료 후 별도 공지	배포 일시	2022. 10. 4.(화) 18:00
담당 부서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책임자	과 장 이덕민 (044-201-1531)
		담당자	사무관 김준현 (044-201-1532)

농업 혁신, 미래성장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3만 명 육성

- 농식품부, 제1차('23~'27)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

❶ '27년까지 농업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 혁신을 위해 청년농 2.6만 명 신규 유입

❷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선정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주거·보육서비스 확충

❸ 2040년 청년농 비중: (당초) 전체 농업경영주의 1.2% 전망 → (계획 이행 후) 10.0%

주요 내용

□ 농식품부는 10월 5일 「제1차('23 ~ '27)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

□ 이번 계획은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기 위한 현장 수요 기반의 체감도 높은 정책 지원에 초점을 맞춰 4대 추진 전략 설정

1 '더 많은' 후계 청년농 지원	❶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개편 ❷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2 보다 '쉽게' 농지·자금 확보 지원	❶ 농지공급 규모 확대, 다양한 농지공급 방식 도입 ❷ 융자조건(상환기간, 금리) 개선, 정부 직접투자 펀드 조성
3 '전문농업인'으로 '성장' 뒷받침	❶ 성장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❷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연구개발(R&D) 연계 지원
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❶ 임대주택 확대, 보육서비스 확충 ❷ 농촌공간 정비, 지역단위 연계(네트워크) 형성 지원

□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고령농 중심의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을 완화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갖춘 청년농 유입을 촉진할 예정이며,

□ 청년농 비중이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에서 2040년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

Ⅰ. 추진배경 및 대책의 요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 산업화'를 위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40세 미만 청년농 3만 명 육성에 나선다.

그동안 청년농 규모는 지속 감소*하여 2020년 기준 12.4천 명, 전체 농업 경영주의 1.2%로 일본**(4.9%)·프랑스(19.9%)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농은 계속 증가하여 전체의 56.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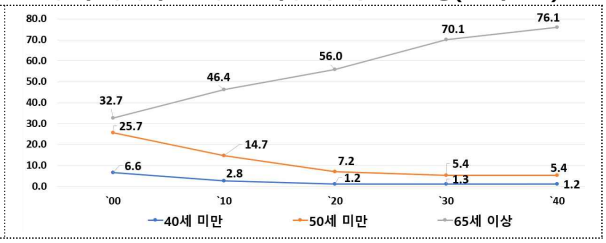
* 청년농(40세 미만 경영주) 비중 : ('00) 6.6% → ('10) 2.8 → ('20) 1.2

** 일본의 기간적 농업종사자(한국의 경영주 개념) 중 40세 미만 비중('20. 농림업총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2040년 고령농 비중은 76.1%까지 상승하는 반면 청년농 비중은 1.2%에서 정체될 전망으로, 우리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미래산업화를 선도할 청년농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 국가별 40세 미만 경영주 비중(단위 : %) >

< 농가 경영주 연령별 비중 추이 및 전망(단위 : %) >



고령농 이탈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청년농 신규 유입 규모(5년간 총 2만 6천 명으로 추산)와 5년 후 40세를 초과하는 청년농 규모(약 8천 명) 등을 고려할 때 2027년까지 3만 명 육성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 기존 청년농(1만 2천 명) - 연령 초과로 인한 자연이탈(8천 명) + 신규 유입(2만 6천 명) = 3만 명

이에 농식품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청년농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21.5)을 바탕으로 체감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 간담회(7회), 전문가 포럼(4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다.

* 전국의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의 농업인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국갤럽)

농식품부는 이러한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영농정착지원 및 후계농 확대, 농지·자금 지원 대폭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더 많은' 청년농과 후계농을 지원

◇ 5년간 청년농 총 2만 6천 명* 신규 유입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22: 2천 명 → '23: 4), 후계농업경영인('22: 3천 명 → '23: 5) 등 선정 규모 대폭 확대

* 연도별 청년농 신규 유입: ('23) 4천 명 → ('24) 5 → ('25) 5 → ('26) 6 → ('27) 6

먼저 주요 창업지원 사업 대폭 확대로 청년들의 농업 유입 통로를 넓힌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22: 2천 명 → '23: 4)하고, 정착지원금 지급단가도 인상('22: 월 최대 100만 원 → '23: 110)한다.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청년농에게 월 최대 110만 원 정착지원금 최장 3년 동안 지급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22: 3천 명 → '23: 5)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투자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이후 후속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규모도 확대('22: 3백 명 → '23: 5)한다.

* (후계농업경영인) 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미만 농업인에게 농업 투자자금 융자 지원
(우수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5년 이상 경과 시 저금리 자금 융자 지원

2. 보다 '쉽게' 농지와 자금을 확보하도록 뒷받침

◇ (농지) 5년간 총 25.3천ha* 공급을 위해 농지은행 비축농지 확대, 공급방식 다변화

* 청년농 농지공급 필요 면적 : ('23) 4.2천ha→ ('24) 4.6 → ('25) 5.05 → ('26) 5.5 → ('27) 6

◇ (자금) 청년농 대상 융자자금 규모 확대,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

첫째,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청년농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한다.

먼저, 청년농에게 공급 가능한 농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농지은행의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기존 상속농지 등으로 제한되었던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범위를 넓히고 매입 단가도 인상*한다.

* 농지은행 비축농지 매입단가: ('22) 388백만원/ha → ('23) 408백만원/ha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농의 생애 첫 농지 취득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인상*하며, 자부담분에 대한 농신보 보증(최대 3억 원)도 제공한다.

* 청년농·생애첫농지취득 지원 규모 : ('22) 100ha → ('23) 140
청년농·생애첫농지취득 융자 단가 : ('22) 154백만원/ha → ('23) 254(65%↑)

또한, 유휴농지를 정비하여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주택단지 등과 연계한 '농업스타트업단지'를 신규 조성('23: 6ha)하고, 청년농이 희망 농지를 최대 30년 동안 임차하여 경작한 후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 - 후매도' 방식을 도입('23 : 20ha)한다.

둘째, 융자자금의 지원 한도 상향, 금리 인하, 상환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먼저,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상향(3억 원 → 5)하고 금리를 인하(2%→1.5)하며,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까지 확대(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한다. 이를 통해 후계농자금을 이용하는 청년농의 상환 부담이 연간 약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수후계농자금의 금리도 인하(1%→0.5)하며,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도 상환기간을 최대 25년(5년 거치 10년 상환 → 5년 거치 20년 상환)까지 확대한다.

셋째,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가진 청년들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 펀드 투자를 강화한다.

기존의 재무성과·수익성 위주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성·영농의지 등이 우수한 청년농에게 적극 투자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정부(금융공공기관)가 전액 출자('23: 30억 원)한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아울러, 청년전용펀드(영파머스펀드)도 2027년까지 총 1,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1차 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 등으로 다각화하는 것을 뒷받침한다.

* 조성규모: ('20~'21) 205억 원 → ('22~'27) 1,000억 원 추가 조성

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 (교육) 창업 성공을 위해 민·관 협력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전환

* 농업 교육 필요 인원 : ('23) 19.7천 명 → ('24) 23 → ('25) 27.3 → ('26) 31.6 → ('27) 36

◇ (연구개발) 현장실증, 실용화,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 연구개발(R&D) 예산규모: ('22) 156억 원 → ('23) 243 → ('27) 332

먼저, 농업 교육을 실전형 창업 교육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

현장실습 중심 실전형 교육을 강화하고, 2023년부터 선도 청년농을 실습 전문교수로 양성하여 이들의 경험과 기술을 적극 이전하는 방식의 교육을 도입한다. 또한, 청년농 유입 증가에 맞춰 마이스터대학, 시·군 농업기술센터, 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또한, 연구개발(R&D) 성과를 창업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청년농이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기관의 실증연구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고,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발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농식품 연관산업에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농식품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한다.

4.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공간 조성

◇ (주거) 농촌지역의 주거·보육 서비스 확충, 농촌공간을 새롭게 정비

◇ (교류) 청년농의 자율적 커뮤니티 형성, 지역사회 기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주거·보육 서비스를 확충하고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한다.

청년들이 안심하고 농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시설(육아·문화 등)이 설치된 임대주택단지인 '청년농촌보금자리'를 확대('22: 5개소 → '23: 9, 누적)하고, 농촌에 특화된 국공립 돌봄시설을 지속 확충한다.

또한, 농촌공간정비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 인접한 유해시설의 이전과 집적화를 지원(연 40개소)하고 안전·위생 등 생활 기반 시설(인프라)도 지속 개선한다.

선·후배 청년농 간 자율적인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농촌에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 활동 지원도 확대한다.

Ⅲ.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농식품부는 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후계·청년농 육성 정책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 (구성) 정부(농식품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청년농 등

또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청년농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창업 예비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농업창업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청년농에게 농지·자금·교육·주거 등 창업 및 농촌정착 정보를 통합하여 일괄(원스톱)로 제공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계획 이행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고 이후에도 유입 추세를 이어간다면 2040년에는 청년농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업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창의력과 혁신 능력을 보유한 다양한 배경의 청년농 유입으로 농업의 혁신과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붙임. 1.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목표 및 추진 전략
2. 후계·청년농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별첨 제1차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안)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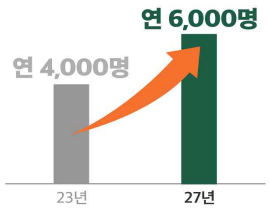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제1차('23~'27) 후계 ·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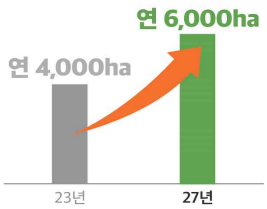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 미래성장 산업화를 선도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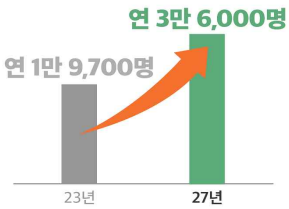
청년농 3만 명을 육성하겠습니다



청년농 신규 유입
2만 6천 명('23~'27)



청년농 농지 수요
25,350ha('23~'27)



청년농 교육 수요
13만 8천 명('23~'27)

전략 01

"더 많은" 후계·청년농을 지원하겠습니다

-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확대(2,000→4,000명)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3,000→5,000명)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확대(300→500명)

전략 02

보다 "쉽게" 농지·자금을 확보하도록 돕겠습니다

- 농지은행 매매·임대 지원 강화
  - 청년농 대상 농지 공급 물량 대폭 확대
  - 새로운 농지공급 방식 도입
    (농업스타트업 단지 조성, 선임대 후매도 도입)

- 융자조건 개선(후계농 자금)

15년 ▸ 25년	2% ▸ 1.5%	3억원 ▸ 5억원
상환기간 확대	금리 인하	한도 상향

- 정부(금융공공기관) 직접투자 펀드 조성

전략 03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습니다

- 성장 단계별 맞춤형·현장형 교육 제공
  - 실전형 창업 교육 확대
  - 청년 실습 전문 교수 양성
- 융복합화 등 소득 다각화 지원
- R&D(기술, 판로) 연계 지원

전략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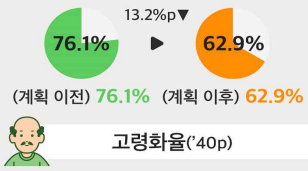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으로 분명한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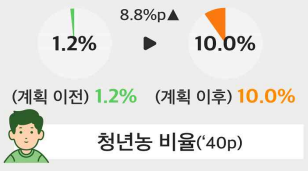
- 임대주택 확대, 농촌 보육서비스 확충
  - 청년농촌보금자리 확대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확대

- 농촌공간 정비
- 청년농 커뮤니티(공동체)형성 지원

청년농 3만명+α 육성(~'27), 농업 인력구조 불균형 완화

- 장기적인 유입 추세(5년 동안 26천명) 유지로 고령화율 완화, 청년농 비율 증가





붙임2 후계 · 청년농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농림축산식품부

준비부터 성장까지

생애 전 주기를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준비

01 예비 창업자 : 사전 보육 + 창업 준비 여건 제공

(1) 농업계 학생
- 농고 - 농대 연계교육
- 영농창업특성화과정(농대)
- 한농대 창업교육

(2) 비농업계 청년
- 창업 보육 프로그램
  (시·도) 청년 CEO 과정
  (시·군) 청년농업인 대학
- 스마트팜 보육센터

(3) 예비 귀농인
- 농촌에서 살아보기
- 청년귀농 장기교육

+

창업 준비 여건 제공

생활안정 : 장기보육과정 중 영농 병행 시 영농 '정착지원금' 지원

승계지원 :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20억 원→ 30)

창업정보 플랫폼 : 농지·자금·주거 등 창업·정착 정보 통합 제공

진입 · 정착

02 신규 농업 창업자 : 창업 기반 + 진입·정착 여건 제공

(1) 후계농업경영인(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 후계농자금
  최대 5억 원, 5년 거치 20년 상환, 금리 1.5%

(2) 청년농 영농정착지원(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
- 정착지원금 : 월 최대 110만원, 최장 3년
- 농지 : 농지은행 비축농지 최우선 공급
  농업스타트업단지, 선임대 후매도

(3) 50세 미만 신규 농업인 중 (1), (2) 제외
- 자금 : 귀농자금 등 융자
- 지원금 : 지자체별 보조사업
- 농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은행)

+

교육·컨설팅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안정적 진입·정착 여건 제공

교육 : 실전형 창업 교육, 선도 청년농 활용 교육

컨설팅 : 창업 형태·단계별 컨설팅 제공

정주여건 : 주거여건 개선, 농촌공간 정비

성장

03 전문농업인 : 후속 투자 + 전문 교육 + 융복합화 + R&D 지원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기술·경영 고도화 지원

후속투자 : 우수후계농자금, 청년전용펀드 등

전문교육 : 첨단기술교육, 전문가 양성

융복합화 : 융복합을 통한 소득 다각화

R&D : 실용화, 농식품 연관산업 창업 뒷받침